

‘통합특별시’에 20조 지원…‘서울시급’ 지위 부여

김민석 총리, 행정통합 4대 분야 인센티브 발표

2차 공공기관 이전 우대…교부세·지원금 등 신설
투자유치 지원 기업하기 좋은 ‘창업중심 도시’ 육성
광주·전남 통합땐 예산 25조 규모 ‘빅3’ 광역단체로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통합 광역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5조원의 재정과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 강화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2·8·10·19면 △재정지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이전 △산업활성화 등이다. 통합특별시에는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현실화되면, 광주·전남은 광주 7조7000억원, 전남 11조7000억원을 더해 연간 예산 25조원 규모의 재정력을 갖춘 국내 빅3 광역단체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가칭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을 신설한다. 세부방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통합지방정부 재정지원 특별팀(TF)에서 확정한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이전 등에 있어서도 통합 특별 정부가 인센티브를 마련한 4대 분야는 시를 우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정지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이전 △산업활성화 등이다.

통합특별시에는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가칭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을 신설한다. 세부방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통합지방정부 재정지인 텔넷도(TED)에서 확정된다.

재성시원 특별팀(TF)에서 확성한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한다.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으로 높이기로 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가 가능해지고, 소속 공무원 선발, 임용, 승진 등 인사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도 강화된다. 공공기관 이전 등에 있어서도 통합 특별시를 우대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범시도민 협의회 발대식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및 주요 내빈들이 통합기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정부 “재정분권 확대 위해 국세·지방세 7대 3 상향”

12명 위원 범정부TF 출범…상반기 세부안 도출

‘지방주도 성장’ 재정여건 개선 방안도 논의키로

정부가 현재 '7.5대 2.5' 수준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상향 조정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재정분권 TF(태스크포스 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를 발족하고, TF 첫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종합적인 재정분권 안을 상반기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준으로 변화했다"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를 좀 높여서 7대 3 수준까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TF에 참여하는 정부위원은 심종섭 국조실 국정운영실장,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장홍채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강영규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 등 5

윤창렬 실장은 “그동안 정부에서 1, 2 단계로 지방재정분권 문제를 논의해 온 결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지난 2018년 ‘78대 22’에서 지난 2023년 ‘75대 25’ 수 명이다. 이밖에도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인 민간위원 6명(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 원장, 남수경 강원대 교육학과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손희준 청주
대 행정학과 교수, 이재원 부경대 행정복
지학부 교수,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
과 교수)이 함께 참여해 TF는 총 12명이

윤 실장은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재정 분권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금년 상반기 내에 안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1·2단계 재정분권 등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재정여건 개선방안도 심도있게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월 1회 이상 TF 회의를 열어 세부적인 재정분권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민 숙원’ 전남 국립의대 신설 탄력 받는다

순천대 학생들, 목포대와 대학통합 '찬성'

대학축, 통합·의대 정원 배정 절차 밟을 듯

전남 순천대가 우여곡절 끝에 국립목포대와의 통합에 대한 구성원 동의를 확보하면서 통학을 전제로 출지대 온 참여했으며, 찬성은 1574명 (50.34%), 반대는 1553명 (49.66%)으로 나뉘어졌다.

국립 의과대학 설립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전남도와 순천대학교 등에 따르면 순천대는 지난 16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 통합 찬반 재투표에서 찬성을 50.34%를 기록해 가결 요건인 과반을 충족했다. 전체 학생 6328명 가운데 3127명(49.42%)이 투표에 참여해 이같은 결과를 낳았다. 순천대는 찬성 3127명, 반대 3191명, 투표율은 49.42%였다. 찬성률은 50.34%로, 2015년 11월 20일 찬성 49.42%, 반대 50.58%로 1.16% 차였다. 찬성률은 2015년 11월 20일 찬성 49.42%, 반대 50.58%로 1.16% 차였다.

순천대는 목포대와 함께 통합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해 교육부의 통합 심사를 받을 계획이다. 대학 측은 “대학 내부 논의와 목포대와의 협의를 거쳐 향후 일정과 절차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여곡절 속에 대학 통합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전남도와 목포대, 순천대가 공동으로 추진해 온 국립

의과대학 설립 역시 한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최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보고서를 토대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배분 논의를 진행 중이다. 순천대의 통합 찬성 결정에 대해 김여론 도지사는 학여이 뜨우 박현다.

김 지사는 “대학 통합이라는 중차대한 선택 앞에서 지역의 미래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준 양 대학 구성원께 감사드린다”며 “성찰과 속의를 거듭해 이뤄진 이번 결정은 집단지성의 힘이 응축된 값진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순천=박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